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7, pp.269-309  
<https://doi.org/10.29212/mh.2025..137.26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정전회담 최종 국면에서 금성 전투의 전략적 평가

-전선과 정전회담 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김인범 | 대한민국 육군

- 목 차
1. 서론
  2. 전선과 정전회담 간 상관관계 분석
  3. 금성 전투의 배경, 경과, 결과
  4. 금성 전투의 전략적 의의
  5. 결론

**초록** 본 연구는 정전회담과 전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작전·전술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성 전투를 재조명하고 그 전략적 의의를 평가하였다. 회담-전선 간 상관관계는 정전회담 회의록을 바탕으로 각 측의 휴회 제안 횟수와 어조 변화를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우선 양측의 휴회 제안 횟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금성 전투 전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금성 전투 발발 후 유엔 측이 설전의 주도권 쟁탈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음과 양측의 주도권 확보 시도가 더 치열해졌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측의 어조 변화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금성 전투 전후 회담장 내 주도권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어조 분석 측면에서 반공포로 석방사건과 금성 전투를 비교하며 그 수준을 재고하였다. 이를 통해 금성 전투를 기점으로 양측의 상대적 공방

이 전환되었으며, 전략적 수준에서 금성 전투가 반공포로 석방사건과 연속적으로 발발한 사건임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6·25전쟁 말 혈전(血戰)이 무의미하지 않았으며, 금성 전투가 현재의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금성 전투의 사례를 통해 현 대북정책에 올바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현대 분쟁의 협상과 전장 간 상관관계 및 패턴을 이해할 수 있고, 국제 갈등의 종결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 Word) : 6·25전쟁, 금성 전투, 정전회담, 정량, 정성

원고투고일 : 2025. 09. 15. 심사수정일 : 2025. 11. 29. 게재확정일 : 2025. 12. 15.

## 1. 서론

6·25전쟁 말기의 혈전(血戰)과 설전(舌戰)에 대한 대중과 학계의 관심 부족은 심각하다. 우선 영화 고지전(2011)은 전쟁 말 혈전을 소모전과 고지전의 연속으로 그리며, 수많은 목숨이 무의미하게 희생되었다는 강한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 학계에서도 전쟁 말 혈전의 의의를 찾는 것이 경시되는 등 연구 성과가 미진했다.<sup>1)</sup>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전쟁 말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전회담 기간 회담장에서는 설전이, 전장에서는 혈전이 되풀이되었고 정전회담 종결 직전에 마지막 대규모 전투인 금성 전투가 발발했다.<sup>2)</sup> 그러나 금성 전투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하다.<sup>3)</sup> 금성 전투는 오늘날 금성지구 “전투”, 즉 전술·작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전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전투

- 
- 1) 김보영(2013)은 특히 전선에서의 움직임이 정전협정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로즈베리 풋의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cy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의 주장을 빌려옴에 그쳤기 때문에 김보영이 위 연구를 진행함에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보영, 「정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역사와 현실』 제88호 (2013): 3~15쪽.
  - 2) 나중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 전쟁』 (서울: 양서각, 2020); 나중남,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제105호 (2017): 45~94쪽; 강지현, 「6·25전쟁 정전협상 초기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군사』 제132호 (2024): 1~40쪽. 등 참고.
  - 3) 박일송(2020)의 연구가 금성 전투를 다룬 대표적 연구이다. 박일송은 이 연구에서 작전적으로 금성 전투를 평가하며, 국군의 전투 수행 능력을 시험하며 그 효율성의 보장이 군단급 이상으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관심이 미미했던 금성 전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필요함을 촉구하고 있어 학계에 시사점이 크다. 박일송, 「6·25전쟁 시기 제2군단의 전투 효율성으로 본 금성 전투의 의의」, 『군사연구』 제150집 (2020): 111~136쪽.

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정전선언이 발효되었으며 관심 자체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설전인 정전회담 또한 6·25전쟁을 종결시킨 정치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하나 정전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관심이 부족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정전회담을 다룬 일부 연구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정전회담 체결의 지연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다.<sup>4)</sup> 이 연구들은 회담의 주체를 남북한이 아닌 미·중·소로 지목하며 이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회담의 갑작스러운 체결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스탈린(Joseph V. Stalin)의 죽음이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당선 등 외부적 요인을 체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sup>5)</sup> 이것은 정전회담의 주체가 남북한이 아닌 유엔과 중공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은 있으나, 전선과 군사적 움직임 등 내부적 요인은 다루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주제는 정전회담 그 자체를 정치적, 국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

- 4) 김보영(2011)은 회담의 주체를 미국과 중공으로 지목하며 이들의 의견충돌을 회담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보영(2013)은 또한 포로 송환문제에 공산과 유엔 측이 원칙이 아닌 명분과 체면에 집중하여 종전 지연의 원인이 중공과 유엔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일영(2013)은 피어슨의 정치적 분석 틀을 통해 양측의 '비밀정보 독점과 왜곡', '의무이행의 문제와 강대국의 안전보장', '이슈화의 개별화'를 체결 지연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김보영, 「연구동향 : 한국전쟁 휴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역사와 현실』 제80호 (2011): 345~359쪽; 김보영, 「유엔군의 포로 정책: '석방'과 '송환'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6호 (2013): 177~221쪽; 정일영, 「한국전쟁의 종결에 관한 연구: 휴전협상의 지연과 협정체결의 요인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16권 제2호 (2013): 7~40쪽.
- 5) 강성현(2021), 김영호(2013), 이종관(2011), 정병준(2019)이 대표적 연구이다. 강성현, 『작은 '한국전쟁' 들: 평화를 위한 비주일 히스토리』 (서울: 푸른역사, 2021); 김영호, 「6·25전쟁 개전 결정과 휴전협상 과정에서 공산 3국 사이의 공조에 관한 비교 연구」, 『평화학연구』 제14권 제5호 (2013): 73~90쪽; 이종관, 「6·25전쟁 당시 미국의 핵무기 정책? 아이젠하워 정권을 중심으로」, 『군사』 제78호 (2011): 109~127쪽; 정병준, 「한국전쟁 휴전회담과 전후체제의 성립」, 『한국문화연구』 제36호 (2019): 245~288쪽.

하는 것이다.<sup>6)</sup> 이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정전회담의 구조와 성격, 의제, 쟁점, 전략 및 지휘·통제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성 전투를 재평가하여 정전회담과 ‘지리멸렬하고 무의미한 군사적 충돌’로 평가받는 전쟁 후반부의 전선 간 상관관계를 재고하고 그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두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단행본 및 1차 사료 분석으로 공간사<sup>7)</sup> 및 회담장 내 주도권 흐름 양상을 분석하였다. 둘째, 정전회담 회의록의 ‘각 측 휴회 제안 횟수’와 ‘어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전선과 회담장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회담장에서 양측이 취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임으로 휴회 제안과 어조 등을 통하여 금성 전투의 의의를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금성 전투를 구성하는 중공군의 6월 공세와 7월 공세 중 후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공자였던 중공군이 6월 공세 당시 증강된 1개 군만 동원하였던 반면, 7월 공세에는 5개 군을 동원하며 양측의 역량이 더 집중된 시기이기 때문이다.<sup>9)</sup>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각 측 휴회 제안 횟수를 통

6) 김보영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사학연구』 제90호 (2008): 337~374쪽; 김보영, 「정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역사와 현실』 제88호 (2013): 3~15쪽.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전투사 금성 전투』 (서울: 증원문화사, 1987);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한국전쟁사 아틀라스』 (서울: 육군사관학교, 출간일 미상); 나중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 전쟁』 (서울: 양서각, 20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11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서울: 국군인쇄창, 2013)

8) 클라우제비츠는 저서 『전쟁론』에서 전쟁을 ‘자신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는 폭력적 행위’라고 정의했다. 6·25전쟁의 전략적 층위에 해당하는 정전회담이 전선의 ‘혈전’과 맞먹는 ‘설전’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회담장에서 양측 모두 상대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자 노력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전투사 금성 전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7), p.8. 군사편찬연구소는 또한 7월 공세를 “중공군이 진지전으로 돌입

계적으로 검토하여 금성 전투 전후 전선 상황과 양측 휴회 제안 횟수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휴회 제안 횟수 분석은 반복적이고 유의미한 단어의 양적 분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의 문서 분류와 의미 부여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석 틀로써 그 신뢰도는 높다.<sup>10)</sup> 정전회담에서 휴회 선언은 한 측이 특정한 이유로 상대측에게 휴회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면 선언되었다.

또한, 정전회담 회의록을 기반으로 ‘각 측의 어조’를 분석하여 금성 전투 전후 회담장 내 분위기의 흐름을 정성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금성 전투와 ‘반공포로 석방사건’의 어조변화 상관관계를 전략적 수준<sup>11)</sup>에서 분석하였다. 이상호의 연구(2007)는 어조

---

한 이래 가장 큰 전역이었고, 견고한 국군 및 유엔군의 진지에 대해 실시한 최대 규모의 공격작전이었다. 이 전투는 6·25전쟁 중 국군과 유엔군을 모두 합해 군단급 부대가 동일한 작전지역에서 방어와 철수 그리고 반격 등 일련의 작전형태를 전환해가면서 전개한 유일한 전투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며 그 의의를 강조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11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서울: 국군인쇄창, 2013), 4741쪽.

- 10) “일반적으로 문서를 자동 분류하는 방법은 이미 분류되어 있는 문서들로부터 문서 내에 나타나는 단어의 출현 횟수나 분포, 확률 등을 이용하는 통계적인 방법과 자연어 처리를 통하여 문서 내에 있는 문장의 의미나 구문을 분석하는 의미 분석 방법이 있다.” 허강호·양진우·김동현·복경수·유재수, 「단어 빈도와 유사도 분석 기반의 회의록 요약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0호 (2019): 621쪽.
- 11) 용병술 차원의 관점에서 각 주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개념으로 전략과 작전, 전술을 제시한다. 위 세 가지 개념은 시대 발전에 따라 그 정의와 범주가 다양하게 정의되었는데, 그중 전략은 국가의 정치적 차원에 해당하는 최상 수준이다. 배정호(2000)는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용어를 “국가에 국내외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치·목표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익 및 국가 목표를 추구해 가는 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정의하였고, 김정기(2021)는 전략적 수준에 따라 전략적 목표가 결정되고, 전략적 목표가 자원을 할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침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략을 ‘국가가 목적 달성을 위해 군사력 등 가용한 자산을 운용하는 술과 과학’으로 정의하고 적용하였다.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김정기, 『금성전투와 쿠이토 쿠아나발레(Cuito uanavale) 전투에 대한 비교 연구: 용병술 차원의 관점에서』, 『군사논단』 제105권(2021): 230~239쪽.

분석의 방법론을 ‘잠재적 내용’ 및 ‘질적 내용’으로 평가하였다.<sup>12)</sup> 이 연구에서 이상호는 단어의 빈도수로 대표되는 ‘명백한 내용’에만 집중할 경우, 메시지 전달자의 진의 파악과 커뮤니케이션의 인과관계 추론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질적 분석을 강조하였다. 임난영(2022)의 경우, 실제로 어조를 분석의 틀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sup>13)</sup> 따라서 금성 전투와 양측 어조 변화의 상관관계를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 2. 전선과 정전회담 간 상관관계 분석

정전회담은 본회담, 합동 분과위원회, 참모장교회의, 연락 장교회의, 연락단 회의와 통제 장교 회의로 구성된다. 본회담은 각 측에서 5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각 측의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 회담이고, 합동 분과위원회는 본회담에서 결정된 안의 세부 사항을 토의하는 장이다. 참모 장교 회의는 문안 등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했으며, 연락 장교 회의는 일반 행정사무를, 연락단 회의는 전체 회의록 사본과 첨부 문서 관리를, 통제 장교 회의는 비망록 작성을 담당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전의 전체적 안을 협상하는 가장 중추적 회담인 본회담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12) 이상호(2007)는 ‘Holsti’의 의견을 빌려 잠재적 내용을 ‘텍스트 혹은 특정한 상징이 함축하고 있는 미묘한 의미’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어조를 잠재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호, 「행정학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분석법의 방법론 분석: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1991?2005)의 사례」, 『행정논총』 제45권 제2호 (2007): 1-23쪽

13) 임난영(2022)은 국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정책 태도를 분석할 때 어조값을 측정하여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임난영, 「Birkland의 어조값 측정을 고려한 정책 학습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2022).

1951년 7월 10일부터 진행된 본회담은 양측의 충돌로 인해 1952년 10월 8일 휴회를 선언한 후 1953년 4월 26일 다시 회담이 열리기까지 약 7개월 동안 오랜 휴정의 기간을 가졌다. 본 연구는 회담이 재개된 시점(1953.4.26.)부터 체결되기 직전(1953.7.19.)까지 총 3개월 36차례의 본회담을 분석하였으며, 금성 전투가 발발한 1953년 7월 13일을 기준으로 회담장의 주도권 변화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금성 전투와 정전회담 간 상관관계를 고찰하여 금성 전투의 전략적 의의를 분석했다.

본 장에서는 양측이 가지고 있던 회담-전선 간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과 편지, 회의록 등 내부 연락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양측의 정치적 결정권자들과 전선의 사령관들이 전선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의 주안점인 ‘휴회 제안 횟수’와 ‘어조 변화’ 분석에 유의미성을 부여한다.

1951년 7월 16일 평덕화이(彭德懷)가 리커농<sup>14)</sup>(李克農), 덩화<sup>15)</sup>(鄧華), 세팡<sup>16)</sup>(謝芳)에게 보낸 전문<sup>17)</sup>을 통해 중공이 평가한 회담-전선 간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14) “담판의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하고 대표들의 발언 내용과 얹고 일어서는 일까지 직접 연락관을 통해 지시했다. 2시간 12분간 ‘침묵 대치’라는 기상천외한 담판 모습을 최초로 선보였고, 개회 선포 25초 만에 휴회를 선포하고 회담장을 뜨게 하는 등 온갖 계산된 번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협상 상대방의 진을 빼냈다.” 리커농이 회담장에서 공산 측 대표들을 통제했음과 그의 협상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위 기사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 도구 중 하나인 휴회 선언이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중앙선데이, “上將 계급장 단 ‘붉은 간첩’ 리커농<下>,” 『The JoongAng』, June 8, 20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3174371#home>.

15) 덩화는 대장 계급으로 1951년 7월 1일부터 동년 10월 24일까지 회담장 내 중공군의 대표였다. 또한 금성 전투 기간 중공군 사령관과 정치위원 대리를 겸하고 있었다.

16) 세팡은 소장 계급으로 1951년 7월 10일부터 53년 4월 26일까지 회담에서 중공군의 대표였다.

17)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3』,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옮김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2005), 129쪽.

회담은 한국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가장 절박한 업무이고 정치투쟁과 군사투쟁의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침략 집단에게 공세를 취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중략- 만약 평화적 공세의 정치투쟁이 없이 단순한 군사적 투쟁만 있다면, 미국을 신속하게 고립시키고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중략- 그렇지만 정전회담은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더 강도 높은 군사투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다시 두세 차례의 비교적 큰 군사적 승리가 있어야 비교적 적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정전회담의 실질적 수행자인 리커농<sup>18)</sup>과 전선의 실무진이던 덩화, 셰팡에게 중공군 최고사령관인 펑더화이가 정전회담의 의미와 회담-전선 간의 정적(正的) 관계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공산 측<sup>19)</sup>에서 전선을 회담의 주도권 장악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음을 시사한다.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에 수록된 1951년 7월 26일 마오쩌둥(毛澤東)이 펑더화이에게 보낸 전문을 분석한 글에서도 중공이 판단한 회담-전선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18) “마오쩌둥은 회담을 위해 협상전문가인 외교부 부부장 리커농과 그의 보좌관으로 교관화를 북한에 파견했다. 공산 측 협상 지휘체계에서 중심은 중국이었다. 마오쩌둥은 협상대표단과 막후의 전방지휘부로 하는 이원적 구조로 협상 지휘체계를 만들고, 그 위에 최고지도부를 두었다. 최고지도부는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김일성으로 이들은 서로 협상하고 스탈린과 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의 의견을 참고하여 회담의 총체적 방안, 방침, 원칙을 확정하였다.”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사학연구』 제90호 (2008): 337~374쪽

19) 본 연구는 정전회담에 참가한 양 측의 전략과 협상 태도에 중점을 두므로, 용어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 ‘유엔 측’, ‘공산 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다만, 군사작전적 측면이나 전투 전개 상황과 관련이 있는 문맥의 경우 ‘유엔군’, ‘공산군’이라는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하였다. 이는 정전회담 회의록에 기록된 양 측의 용어 사용 표현 관행을 준용한 것이다.

제6차 전역 계획이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전역 계획은 휴전회담의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었고 휴전회담의 필요에 의해 폐기된 것이었다. 제6차 전역 계획의 제안과 폐기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지원군의 전략지도 활동과 고도의 투쟁 분석력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휴전 기간 동안 작전과 회담 사이의 정확한 관계와 작전과 회담의 긴밀한 조화, 그리고 작전이 회담에 순응할 필요 등을 보여주고 있다.<sup>20)</sup>

중국 군사과학원은 위 인용구를 통해 전선에서 계획한 전역이 정전회담에 의해 구상 및 폐기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산 측이 전선을 도구로 회담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결하고자 한 의도를 재확인할 수 있다. 중공군이 전선의 움직임을 통해 회담에 영향을 미친 실례 또한 중공군 내부의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53년 6월 20일 중공군 참모장 리다(李達)의 통보문(인민군 전방 사령부, 개성 회담 대표단 수신)이 그것이다.

이승만 비적 도당이 전쟁포로에 관한 협의를 파괴하고 다수의 북한 인민군 전쟁포로를 석방했다. 이런 무리한 행동은 정전협정의 서명을 늦추지게 할 것이고, 세계 여론도 이미 큰 반향을 보이고 있다. 적에게 더욱 큰 압력을 가하여 판문점 회담과 연계시키기 위해, 평터화이 총사령관의 동의를 거쳐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승만 군대에 타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다.<sup>21)</sup>

공산 측이 정전회담에서 전선의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전회담 회의록에서도 드러난다. 1952년 7월 23일 110차 군사 정전회담 회의록을 살펴보면 공산 측 대표가 유엔 측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20) 앞의 책, 143쪽

21) 앞의 책, 651쪽.

회담장 밖에서 당신의 무자비한 폭격과 기총소사도 회담 안에서 당신의 독단적인 태도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에게 당신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일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sup>22)</sup>

당시 회담에서는 중공군 포로의 송환과 송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시에 전선에서는 오랜 휴식기를 깨고 국군과 유엔군이 제한적 규모의 공격작전인 ‘카운터 작전’을 실시하여 공산군을 압박하고 있었다. 공산 측의 발언을 살펴보면, 아래의 2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선에서 유엔군의 압박을 공산 측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회담장에서 언급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발언의 의도인데, 공산 측은 유엔군의 군사적 압박을 회담 내 주도권 장악 시도로 보고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 행정부와 유엔군이 인식한 회담-전선 간 상관관계를 미 행정부 내부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1951년 5월 17일 NSC 48/5<sup>23)</sup>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용 가능한 정치적 해결책을 대한민국 내에서 추구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당장의 대안과 해결책이 부재할 경우, 현재의 군사행동을 지속하겠다고 하였다.<sup>24)</sup> 특히 군사행동 의도의 세 가지 항목 중 첫 번째를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입힌다.’라고 명시하며 그 의의를

22) 이상철, 전쟁기념관 편, 『6·25 전쟁 정전회담회의록 제2권: 제27~158차 판문점 본회담 기록(1951.10.25.-1953.07.19.)』 (서울: 전쟁기념관, 2022), 489쪽

23) 강지현(2024)은 NSC-48/5에 의거, 리지웨이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정전협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공산군에게 적절한 군사적 압박(캔자스-와이오밍 선의 강력한 방어력)을 가하여 군사적·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했다. 강지현, 『6·25전쟁 정전협상 초기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군사』 제132호 (2024): 20쪽

24) NSC 48/5의 한국 관련 비망록, (1951)을 참조할 것.

강조하였다. 즉, 미국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인 정전회담과 군사적 수단인 전선을 함께 활용하였으며 그 관계를 밀접하게 인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 국무부의 정책 수립처가 1951년 발간한 한국 관련 문서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산주의 세력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그들의 목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sup>25)</sup> 동년에는 중공군의 공세가 많은 사상자와 함께 실패했으며, 협상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총사령부의 방송도 있었다.<sup>26)</sup> 이를 바탕으로 유엔 측도 회담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군사적 충돌을 수단으로 평가·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952년 미 대통령, 국방부 차관 포스터(William C. Foster), 국방부 혈(John Edwin Hull) 장군<sup>27)</sup> 등이 배석한 아래, 포로 문제를 다룬 회의의 비망록 기록에도 정전과 군사적 압박 간 연계에 방점을 두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당시 혈은 “공산주의자들이 정전의 필요성을 느끼는 군사적 위급상황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제한 없는 양보에 기초한 정전 협상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유엔군 총사령관 리지웨이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즉, 리지웨이는 중공군을 협상장으로 이끌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회담과 전선을 직접 통제하던 ‘미 대통령-합참-유엔군 사령관’ 계선에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25) 국사편찬위원회, 「미 국무부 정책수립처 한국관계문서 1」, *대한민국사*, (1951), 『남북한관계 사료집 13』, 519~521쪽.

26) 국사편찬위원회, “릿지웨이 총사령부, 방송으로 공산 측에 정전 협상 재개,” 『서울신문』 (1951).

27) 존 에드윈 혈. 오하이오 출생으로 1951년부터 53년까지 육군참모차장을 지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클라크 장군의 후임으로 제4대 유엔군 사령관이 되어 미국의 대한민국 전략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강지현의 연구에서도 회담-전선 간 밀접한 정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리지웨이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작전적 수준에서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인 '유엔 측 협상대표단의 주도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캔자스-와이오밍선'과 '공세 작전'이라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군사적·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공산 측의 공격을 억제'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sup>28)</sup>

결론적으로 양측의 지휘부가 회담-전선 간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혈전을 설전의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금성 전투의 배경, 경과, 결과

전선이 교착된 이래 1952년 후반, 정전 협상 진행으로 양측은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전선의 휴식 기에도 대병력을 유지하는 한편(1953년 초 공산군 병력 180만), 상대적 열세라 평가받던 포병 화력·보급선·공군력·기계화부대를 강화하는 등 차후 공세를 준비하였다. 한편, 유엔 측은 종전이 휴전으로 결정되자, 국군의 양과 질을 증가시켜 유엔군 철군에 대비하고자 하였다.<sup>29)</sup> 1952년 10월 말 한미는 국군의 병력 수준을 2배 가까이 증강하기로 결의하고 사단을 증편하는 한편, 포병·기

28) 강지현, 「6·25전쟁 정전협상 초기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군사』 제132호 (2024): 12쪽.

29)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군사』 제63호 (2007): 213~266쪽.

갑·공군·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하였다.<sup>30)</sup>

1953년 6월 8일, 오랜 시간 타협을 보지 못했던 포로 송환 문제가 회담장에서 타결되자 양측은 전쟁이 곧 종결되리라 직감했다. 이에 공산 측은 승리했다는 선전과 정전 전까지 최대한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회담이 결렬되지 않는 선에서 전선에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정전에 대한 이승만 정부와 대한민국 여론의 강한 저항<sup>31)</sup>을 꺾고 안정적인 회담 종결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sup>32)</sup>

이에 따라 1953년 5월, 공산군은 국군을 고착시키고 피해를 강요하기 위해 중부 전선의 689고지, M1 고지, 271고지, 수도고지 등에서 대대 및 여단 규모로 ‘5월 공세’를 감행한 데 이어 6월 10일~18일까지 1개 군 규모로 6월 공세를 실시하였다. 6월 공세는 중부 전선 및 화천 북방 금성 돌출부 국군 2군단의 중앙 및 우익에 배치된 제8사단 및 5사단 정면으로 지향되었다.<sup>33)</sup> 공산군의 공세는 국군 2군단이 담당하는 금성 돌출부 지역의 수도 고지 방면이었는데, 이를 통해 국군의 유생역량을 소멸시키는 것은 실패하였으나, 13km 정면에서 4km가량 남진(금성천~북한강 선)함에 성공하였고, 국군 2군단을 북한강 이남으로 퇴각시켰다.

30)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한국전쟁사 아틀라스』 (서울: 육군사관학교, 출간일 미상).

31) 당시 정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매우 좋지 않았다. 1951년부터 정전 반대 국토 통일 국민 총결기대회 등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고 포로 송환 문제가 타결되자 전국적으로 규탄 대회가 열리는 등 정전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32) 김정기(2021)는 금성 전투에서 공산군의 전략적 목표를 국군 응징을 통한 정전 회담 주도권 확보라고 밝혔다. 또한 “금성 전투가 정치적 목적과 전략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김정기, 「금성전투와 쿠이토 쿠아나발레(Cuito uanavale) 전투에 대한 비교 연구: 용병술 차원의 관점에서」, 『군사논단』 제105권(2021): 231쪽.

33) 온창일·김광수·박일송·나종남, 『6·25 전쟁 60대 전투』 (서울: 성우, 2010), 308쪽.

이른바 ‘53년도 하계 공세(5.23.~6.23.)’의 결과와 종료되어 가는 정전회담의 분위기 속 양측은 정전을 준비하였으나, 이승만 정부는 ‘반공포로 석방사건’과 독자적인 군사행동과 회담 결렬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저항했다. 이 같은 정치적 움직임에 대한 보복의 의도로 중공군은 북경에서 최종 결정을 직접 하달받아 화천 북방 금성 돌출부를<sup>34)</sup> 목표로 하여 다시 한번 공세를 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화천까지 진격하여 자신들의 승리라는 선전의 효과와 화천저수지를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휴전회담에 대한 저항을 단절하고자 하였다.

중공군 총사령관 평더화이는 20병단 이하 4개 군과 21군을 더 하여 총 5개 군과 강화한 포병력을 통해 김화~북한강 유역까지 22km 지역을 2단계에 걸쳐 공략하고자 하였다.<sup>35)</sup> 그는 작전적 목표를 전선의 직선화와 국군 유생역량 소멸로 지정하였고 20병단을 주 노력 부대로 선정, 이선동 방향으로 돌파하여 국군을 섬멸하도록 지시하였다. 중공군의 작전개념은 삼면 포위로, 금성 돌출부 양 견부에 주력부대를 투입하여 돌출부에 배치된 국군 사단들의 후방 차단을 기도하였다.<sup>36)</sup> 한편, 미 8군 사령관은 금성 지역에서 중공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 국군 2군단의 방어선을 강화하고 부대를 재배치하여 금성 돌출부에 총 7개

34) 국군 2군단의 금성 지역은 돌출부로서 중공군이 3면에서 2군단을 압박할 수 있어 작전적 목표 달성에 유리한 장소였다. 또한 ‘53년 하계 공세’의 결과로 국군의 금성 지역에 대한 방비가 약화되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35)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한국전쟁사 아틀라스』 (서울: 육군사관학교, 출간일 미상)를 참고할 것.

36) 중공군의 후방차단 개념은 국군의 유생역량 격멸이라는 작전적 수준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다. 전술적 차원에서 중공군은 국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후, 후방의 예비대와 OP, CP, 포병 진지를 우선적으로 습격하였다. 이는 화력에 의해 중공군에 피해를 강요하던 국군과 유엔군의 전술을 고려한 조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전투사 금성 전투』 (서울: 중원문화사, 1987), 111~112쪽.

사단을 배치했으며 예비로 11사단을 화천 북쪽에 배치, 전략적 요충지인 화천의 방비를 강화<sup>37)</sup>하였다.

1953년 7월 13일 21시, 중공군이 금성 돌출부의 양 측방 및 전방 위적 정면에서 국군 2군단과 미 9군단을 타격하며 전투가 시작되었다. 중공군은 2:1의 비율로 국군의 전투력을 상회<sup>38)</sup>하였고 그 공격에 좌·우측 견부에 위치한 수도사단과 3사단이 와해, 2군단 전체가 금성 돌출부에서 포위 가능성에 직면하였다. 2군단장은 예비대(국군 11사단·미 3사단)를 투입, 중공군의 후방 침투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했다. 결국 미 8군 사령관은 국군 2군단·미 9군단에 금성천 남안으로 퇴각을 지시했다. 미 8군의 엄호와 국군의 분전 속 중공군의 진출이 제한되자 국군 6, 8사단은 퇴각하였다.<sup>39)</sup>

국군 2군단과 미 9군단은 14~15일 금성천 이남으로 퇴각, 적근 산~백암산에서 3km 남쪽 일대에 신주저항선(와이오밍 선)을 구축하였다. 미 8군단장은 증원군을 파견하여 공산군의 공세 종말점을 이끌었으며<sup>40)</sup> 16일부터 반격<sup>41)</sup>, 금성천~북한강 이남에 대한 탈환을 시도하였다.<sup>42)</sup> 반격 작전을 통해 19일 11:00 국군 2군단

37) 나중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 전쟁』(서울: 양서각, 2020).

38) 육군군사연구소, 『소련이 기술한 6·25 전쟁 I』, 이은연 옮김, (서울: 플래닛 미디어, 2023). 온창일·김광수·박일송·나중남, 『6·25 전쟁 60대 전투』, (서울: 성우, 2010)는 중공군이 국군보다 병력은 3:1, 화력은 1.7:1로 우세하였다고 평가했다.

39) 14일 10:30에 6사단이 교암산에서 철수를 개시하였고 같은 날 18:00에 8사단 21연대가 최후 철수부대로 금성천을 도하하며 퇴각은 완료되었다.

40) 15일 18:20경 백암산을 점령한 후 중공군은 공세를 멈추었고 획득한 지역에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병력 손실을 보충함에 집중하였다.

41) 내내 좋지 않았던 기상이 회복되어 항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하천 범람으로 중공군의 보급선이 차단되었기 때문이었다.

42) 나중남은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 전쟁』에서 금성 전투가 “유엔군과 공산군이 진지전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실시된 공격 및 반격 작전”이었다며 국군의 재빠른 반격을 통해 “기존과는 확연히 달라진 국군의 전투력 향상을 입증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그의 평가는 박일송(2020)과 궤를 같이한다. 나중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 전쟁』(서울: 양서각,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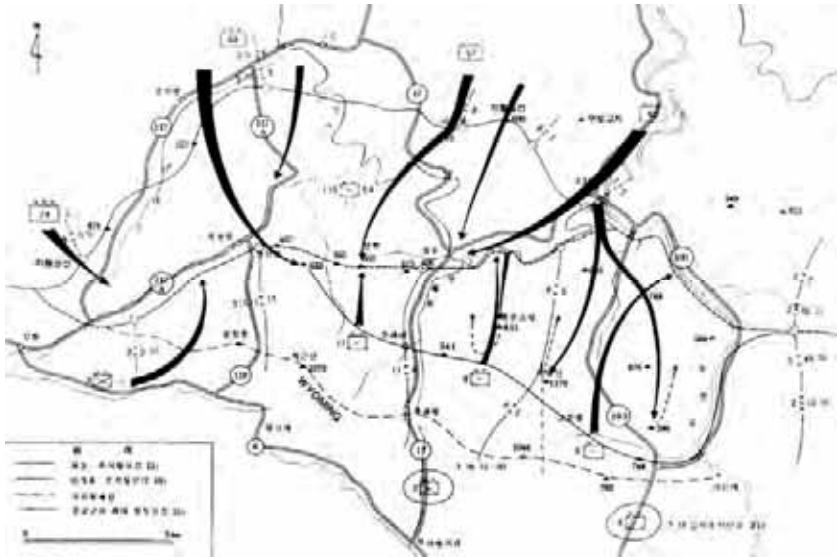
은 금성천~북한강까지 탈환함에 성공하였으나, 중공군의 저항이 강화<sup>43)</sup>되었고 20일 미 8군단장이 정전 문제를 고려하여 공격 중지를 지시하여 금성 돌출부까지 탈환함에는 실패<sup>44)</sup>하였다. 이후 금성 정면 전선은 점차 안정되었고 27일, 정전이 발효됨에 따라 전선이 현 군사분계선으로 전환되었다.<sup>45)</sup>

---

43) 소련은 국군이 반격할 당시 대규모 공중사격 지원의 힘이 컸다고 기술하며 중공군이 퇴각한 것은 후위 업호와 진지 강화를 위해 중공군 사령부가 결정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특히 금성 전투가 중공군의 기술과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 의도는 공산 측이 중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 발전을 강조하고 공산 측의 승전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다. 육군군사연구소, 『소련이 기술한 6·25 전쟁 I』, 이은연 옮김 (서울: 플래닛 미디어, 2023), 282~291쪽.

44) 국군 2군단은 22km 정면 9km 중심까지 철수하였다가 반격 작전으로 공세 전선에서 3~8km의 지역을 소실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한국전쟁사 아틀라스』 (서울: 육군사관학교, 출간일 미상)

45) 중공군 최후 공세의 일자별 흐름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전투사 금성 전투』 (서울: 증원문화사, 1987), 199~202쪽의 도표를 참고할 것.



〈그림1〉

\* 〈그림1〉 : 금성 전투 시기 중공군의 공세와 국군 2군단의 반격 요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전 투사 금성 전투』 (서울: 중원문화사, 1987). 부록 상황도 2.

## 4. 금성 전투의 전략적 의의

### 가. 금성 전투 기간 휴회 제안 횟수 분석

금성 전투가 발발한 1953년 7월 13일 이후 본회담은 19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런데 해당 기간에 선포된 휴회 제안(“휴회를 제의한다.”<sup>46)</sup>)는 각 측의 발언에 근거함)은 이전과 차

46) “~까지 휴회를 제의한다.”,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열 것을 제의한다.”, “어느 한 측이 소집을 요청할 때까지 휴회할 것을 제의한다.” 등의 발언을 통하여 횟수를 종합하였음.

별적인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휴회 선언은 각 측이 의사 발언을 한 이후 ‘공산’ 측이 휴회를 ‘한 번’ 제안하고 유엔 측이 이를 받아들이며 성사되었다. 공산 측이 휴회를 주로 제안한 이유는 휴회 주도를 통해 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측은 당신 측이 우리의 제안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의 휴회 제의는 당신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자 동시에 우리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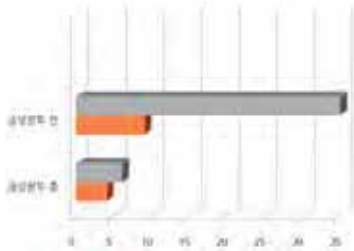
유엔 측 대표의 위 1953년 5월 25일 142차 회담 간 발언의 의도는 회담 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이를 통해 유엔 측이 공산 측의 휴회 제의를 통한 주도권 장악 시도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회담 간 유엔 측이 먼저 휴회 제안을 하였을 경우, 공산 측은 바로 동의하지 않고 추가 발언을 한 후 휴회를 역제안하며 회담장 내 분위기를 이끌었다.<sup>47)</sup> 공산 측의 휴회 역제안은 금성 전투 발발 후에도 확인된다. '53년 7월 14일(제155차 군사정전회담) 공산 측은 유엔 측의 휴회 제안에 “휴회에 동의한다”라고 하지 않고, “만약 당신 측이 오늘 답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내일 오전 11시 정각까지 휴회를 제의한다”라고 하였다. 휴회 제의가 회담 내 주도권 장악의 수단이었음이 재증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쌍방은 금성 전투 발발을 기준으로 얼마나 휴회 제안을 했을까? 금성 전투 발발 전 본회담('53.4.26. 123차 군사정전회담 ~ '53.7.12. 153차 군사정전회담)에서 공산 측은 35차례 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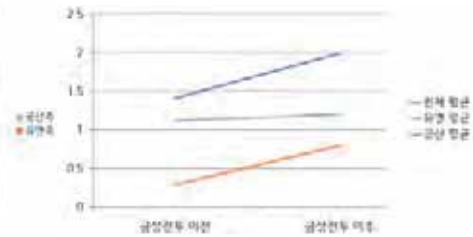
47) 1953년 5월 25일 142차 군사정전회담을 참조할 것.

회를 제의했고 유엔 측은 9차례 휴회를 제의했다.<sup>48)</sup> 금성 전투 발발 이후에는 본회담에서 유엔 측은 4차례, 공산 측은 6차례 휴회를 제안하였다. 아래의 표를 통해 금성 전투 발발 전후의 휴회 제안 양상을 더 가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1〉



〈표 2〉



〈표1〉: 해당 기간 양측의 휴회 제안 횟수 비교

〈표2〉: 해당 기간 회담 1회당 선언된 평균 휴회 선언 비교

(해당 기간 간 각 측 또는 쌍방의 휴회 제안 횟수/회담 횟수)

〈표 3〉

구분	회담 수	공산 측 휴회 제안	유엔 측 휴회 제안	공산 측 회담 당 평균	유엔 측 회담 당 평균
금성전투 전	31	35	9	1.12	0.29
금성전투 중	5	6	4	1.2	0.8

〈표1〉을 통해 금성 전투 발발이 정전회담에 큰 변곡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성 전투 발발 전 공산 측이 유엔 측보다 많은 휴회 제안으로 주도권을 장악했다면, 전투 기간에는 휴회 제안 횟수 차이가 감소한 것이다. 즉, 금성 전투 발발을 계기로 유엔 측이 설전의 주도권 쟁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평

48) 146차 군사정전회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단일 회담에서 유엔 측이 휴회 제안을 0번 하였을 때 공산 측은 5번 휴회를 제안했다. 금성 전투 직전 공산 측이 휴회 제안을 주도하며 유엔 측을 강하게 압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할 수 있다.

양측의 변화는 <표2>를 통해 더 세부적으로 확인된다. 금성 전투를 기점으로 각 회담 당 제안된 평균 휴회 선언의 횟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성 전투 기간 양측이 회담장에서 더 열띤 공방을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공산 측의 회담 당 휴회 제안 횟수는 전투 이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엔 측의 회담 당 휴회 제안 횟수는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위의 변화로 유엔 측에 금성 전투가 영향을 막대하게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표2>와 더불어 <표3>을 통해 금성 전투 전 회담당 휴회 제안 평균 차가 0.83회에 달했던 것에 비해 금성 전투 중에는 0.4회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산 측의 회담 당 평균 휴회 제안 횟수 증가 폭(0.08회)이 유엔 측(0.51회)의 16% 수준밖에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혈전의 격화가 설전의 격화를 유발하였으며 금성 전투 발발을 기점으로 회담의 주도권 양상을 분석했을 때, 상대적으로 공산 측은 공세에서 수세로 유엔 측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 나. 금성 전투 기간 양측의 어조 분석

금성 전투 발발 이전인 1953년 4월 26일부터 정전까지의 정전 회담 회의록에서 각 측의 어조와 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표4>를 코드북으로 제작,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표4>를 제작하기 위해 정전회담 회의록 중 기준에 부합하고 가장 특징적인 발언들을 선정, 이원적 범주(공세적/수세적)로 분류하였다. 이후 분석 진행 과정에서 해당 예시의 발언군을 지속적으로 확장, 표준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담 간 어조 유형의 전체적 흐름과

변화를 파악하였다.<sup>49)</sup>

〈 표 4 〉

어조 유형	유형 정의 기준	예시
공세적	압박, 비판, 반박, 요구 거부, 책임 전가, 대화 거부 등	“(당신들의 어제 발언은) 우리가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모순으로 가득 차 스스로를 옹호할 수도 없다.” “(당신 측은) ~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당신 측이 남조선 정부로 하여금 정전협정을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남조선군을 대상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당신 측은 이미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한 질문을 우스꽝스럽게 반복하는 데 회담 시간을 소모해가며 그를 미루어왔다.” “우리는 여기에 앉아 쓸모없는 수많은 대화를 들을 의사가 없다.”
수세적	방어적 설명, 합의 위한 자신의 태도 강조, 양보 등	“유엔군사령부는 정전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국군 부대의 호전적 행위를 일체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측은 선의로 정전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측은 정전 이행의 보장에 관한 문제에 있어 논의를 결론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 “북조선과 중국 측은 조선 정전이 일단 서명, 발효된다면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을 이행할 것을 스스로 맹세한다.”

49) <표4>에서 확장된 발언군으로 완성된 <부록 1>의 코드북을 참고할 것. <부록 1> 코드북은 본 연구에 원자료의 공개를 통한 재분석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이지원(2025)은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분석한 원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Richard Gray(2023) 또한 질적 연구에서 원자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위 코드북은 원자료로서 정성적 연구의 재현성과 신뢰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지원, 「질적 연구는 어떻게 사회과학적 가치를 확보하는가?: 신뢰성과 외적 타당성 논쟁의 결과와 함의」, 『한국사회학』 제59권 제2호 (2025) : 1~61쪽. Gray, Richard, “Data Sharing in Qualitative Research.” Nurse Author & Editor 33, no. 1-2 (2023): pp. 4~5.

금성 전투 발발 전인 1953년 4월 26일부터 1953년 7월 12일까지 회담장을 달군 주제는 포로 송환과 군사분계선 설정, 정전협정 이행 보장에 관한 건 등이었다. 해당 2~3개월 동안 유엔 측은 공산 측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의견 수렴 시도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회담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sup>50)</sup> 이에 반해 공산 측은 유엔 측의 질문에 의도적으로 대답을 회피하거나 기존의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회담 지연의 잘못을 상대에게 돌리거나 상대가 수렴한 제안을 거부하는 등 회담에 공세적으로 임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 측의 제안에 동의할 때도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밝히며 각 국면에서 다방면으로 입지 강화에 노력했다.<sup>51)</sup>

그러나 금성 전투 기간 유엔 측과 공산 측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우선 금성 전투 발발 직전인 7월 11일과 12일, 유엔 측이 공산 측의 공세적 질문을 무시하거나 공산 측의 회담에 대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등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투 발발 다음 날인 7월 14일 자 회담이다.<sup>52)</sup> 14일 단 하루 동안 유엔 측은 3번 휴회를 제의하였으며 1번 휴회를 촉구했고 각각 2번씩 “할 말이 없다”나 “당신들이 걱정할 바 없다”라고 반응하였다. 위 8번의 발언이 14일 자 회담에서 유엔 측이 언

50) 공산 측의 파키스탄 중립국 지명에 관한 논의와 1953.5.7.에 공산 측이 제안한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등. <부록1>과 『6·25 전쟁 정전회담회의록 제2권: 제27~158차 판문점 본회담 기록(1951.10.25.1953.07.19.)』(서울: 전쟁기념관, 2022), 560~634쪽을 참조할 것.

51) T.R. 페렌바크는 공산군이 회담을 지연시키고자 갖은 애를 썼다고 밝히며, 공산군은 회담을 지연시켜 시간을 번 후 전장에서 성과를 얻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장의 성과를 통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보호를 차단하거나 유엔 개입을 승인하게 강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52) 이상철, 전쟁기념관 편, 『6·25 전쟁 정전회담회의록 제2권: 제27~158차 판문점 본회담 기록(1951.10.25.~1953.07.19.)』(서울: 전쟁기념관, 2022), 743~746쪽을 참고할 것.

급한 유일한 내용이었으며, 금성 전투 발발 후 상대적 공세로 태도를 전환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반해 공산 측은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양보하며 금성 전투 발발 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공산 측은 상대적 수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금성 전투 발발 직전, 회담장에서는 반공포로 석방사건과 이에 따른 정전협정 조항 이행 여부에 대한 건이 새로운 의제로 제기되었다. 반공포로 석방사건은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회담에 반대하며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정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양 측을 뒤흔들었다. 미 정부는 이승만 정부에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등 회유책과 미군 철수 가능성 제시 등 강경책을 사용하여 통제력 강화를 시도했다.<sup>53)</sup> 공산 측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정전협정 보장 여부와 이행 의사에 대하여 질문하며 유엔 대표들을 몰아세웠다. 이에 유엔 측은 이전의 합의를 재확인하며 회담 결과 이행 의사를 계속 밝혔다.<sup>54)</sup> 또한, 유엔 측은 수세적 기조를 반영하듯 “선의로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대화 지속의 의지를 밝혔다.

앞서 기술한 금성 전투 기간과 반공포로 석방사건 직후 양측의 분위기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금성 전투가 반공포로 석방사건과 유사하게 전략적 수준의 사건임을 방증한다. 반공포로 석방사건과 금성 전투 발발 모두 협상장에서 양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

53) T.R. 페렌바크는 한미 협상에서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장기 경제원조, 식량 450만 톤 및 대한민국 육군 사단 증편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테렌바크, T. R, 『이런 전쟁』, 최필영·윤상용 옮김 (서울: 플래닛 미디어, 2019), 790~792쪽.

54) 반공포로 석방에 관한 주제는 반공포로들이 석방된 직후 열린 첫 회담인 1953년 6월 18일 150차 군사 정전회담에서부터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회담에서 공산 측 대표는 김일성과 평터화이의 항의 서한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달하였다.

기 때문이다. 위 분석은 반공포로 석방사건과 금성 전투가 시기적으로 이격되어 벌어지지 않았기에 설득력을 더하며, 결과적으로 두 사건은 ‘전략적 수준에서 연속된 흐름’으로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다. 의의

그렇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반공포로 석방사건~금성 전투의 시기는 정전회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반공포로 석방사건 직전, 회담장에서 양측은 대부분의 의제에서 합의에 달성한 상태였다. 특히, 군사분계선 합의에 대하여 공표 시기를 논하거나 “양측이 현재처럼 노력한다면 정전은 며칠 내에 서명 준비를 마칠 것이다.<sup>55)</sup>”라고 언급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종전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반공포로 석방사건 직후부터 금성 전투 기간까지 공산 측은 ‘이승만 정부의 회담 이행 여부’를 쟁점으로 제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따라서 반공포로 석방사건~금성 전투 시기가 회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었다고 규명할 수 있다.

또 다른 금성 전투의 전략적 의의는 회담장에서 유엔 측이 수세적이고 양보해야 하는 상황을 단절하고 공세적으로 태세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공포로 석방사건 직후 유엔 측은 그 책임을 지고 공산 측 지명 대표에게 경찰 보호를 제공하거나 막대한 수송 부담을 지더라도 직접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를 비무장지대의 남쪽 일대로 옮겨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11일 본회담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정전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때까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 측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했다. 이는 금성 전투 발발 후와 매우 대조적이

55) 149차 군사 정전회담, 제123차 판문점 회담 전체 회의록(1953.06.17.)을 참조할 것.

며, 전투 발생과 전투 간 국군의 성과가 유엔 측이 양보해야 하는 흐름을 단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도권을 기반으로 한 전투의 흐름 또한 회담장에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성 전투 발발 이후에도 회담 간 공산 측의 공세는 계속되었으나, 7월 19일 '158차 군사 정전회담 2부'를 기점으로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158차 군사 정전회담 2부에서 합의에 비협조적이던 공산 측이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수정에 대하여 논의를 제안하고 참모 장교단의 지명 및 연락 장교 회의, 통역사 회의의 소집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유엔 측이 상정한 날짜에 정전협정 서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은 공산 측의 상대적 양보였다.<sup>56)</sup>

공산 측이 협조적으로 응하기 시작한 1953년 7월 19일은 국군 2군단이 중공군의 남진을 꺾고 피탈 당했던 금성천~북한강까지 재진출한 날이다. 신속한 종전 요구 속, 국군 2군단의 효율적 재반격이 무력을 통한 공산 측의 이권 획득을 차단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셈이다. 국군 2군단의 반격이 실패했을 경우, 공산 측은 정전을 최대한 지연시켜 승전이라는 명분과 최대의 실리를 모두 확보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 측이 158차 정전회담 '1부'에서 '2부'로 전환되는 30여 분의 휴회 시간 동안 전선의 상황을 전달받고 전략적 태도를 전환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결과적으로, 금성 전투의 주도권 변화는 회담 내 주도권 향방과 일치하며 양측 모두 물리적 충돌을 통해 정전과 실리를 얻기 어려우리라 판단하게 된 것이다. 즉, 양측 모두 작전적 목표를 포기하고 협상을 통한 정전을 선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6) <부록 1> 참고.

## 5. 결론

본 연구는 금성 전투가 전술·작전적 수준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전략적 수준에서 의의가 있음을 도출했다. 금성 전투를 기점으로 정전회담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휴회 제안 횡수’와 ‘양측의 어조’ 변화를 통해 회담 내 주도권이 급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장에서의 승리가 회담장에서의 협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공포로 석방 사건과 금성 전투 시기 주도권 변화를 비교 분석했을 때, 두 사건이 유사한 수준이며 양측이 공방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금성 전투와 반공포로 석방사건이 전략적 수준에서 연계적으로 이어졌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전쟁 말기의 혈전은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유의미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성 전투의 또 다른 의의는 종전 직전까지 정치적·군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공산 측의 기도를 차단했다는 점이다. 공산 측이 전선에서 우위를 점했을 경우, 전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전선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군 2군단이 금성 전투에서 달성한 작전적 성과는 정전회담 체결과 대한민국의 입지를 제고하였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정전회담이 현재까지 한반도의 정치·군사 질서의 기본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금성 전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기반을 제공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현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953년과 오늘날의 안보 상황을 비교했을 때, 마주한 적과 전장, 주변 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6·25전쟁 당시 양측이 회담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군사적 충돌을 병행한 것처럼, 현 대북정책 역시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협상이 상호보완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sup>57)</sup>

마지막으로, 금성 전투의 사례는 역사적 측면을 넘어 현대 분쟁에서 협상과 전장 간 상관관계를 이해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성 전투의 사례처럼 현대 분쟁은 군사적 충돌과 외교적 협상이 투-트랙(Two-track)으로 동시적, 연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sup>58)</sup> 따라서 본 연구의 전선과 정전회담 간 상관관계 분석은 6·25전쟁 정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갈등의 종결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함에 기여할 수 있다.

57) 김정기(2022)는 전략과 협상의 관점을 사용하며 6·25전쟁 기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 기간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와 동일하게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정치 외교적으로는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의 정지를 가져온 것은 대화와 협상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정기, 「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년) 비교 연구: 개시(조건과 요인)와 정지(협상 과정 및 의제)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5권 제3호(2022): 56쪽을 참고할 것.

58) 김정기(2021)는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결한 사례가 20세기 이래 증가했으며 특히 내전의 경우 그 빈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자 간의 관계나 특히 전쟁의 종결 요인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투와 함께 협상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김정기, 「금성전투와 쿠이토 쿠아나발레(Cuito uanavale) 전투에 대한 비교 연구: 용병술 차원의 관점에서」, 『군사논단』 제105권(2021): 224쪽.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 이상철, 전쟁기념관 편, 『6·25 전쟁 정전회담회의록 제2권: 제27~158차 판문점 본회담 기록(1951.10.25.1953.07.19.)』 (서울: 전쟁기념관, 2022).
- 국사편찬위원회, 「국무부-합동참모본부 회의의 토론 요지 비망록」, 대한민국사, (1953), 국무부-합동참모본부 회의, lot 61, D417.
- 국사편찬위원회, 「NSC 48/5의 한국 관련 비망록」, 대한민국사, (1951), 『FRUS 1951』, 439~442.
- 국사편찬위원회, 「미 국무부 정책수립처 한국관계문서 1」, 대한민국사, (1951), 『남북한관계 사료집 13』, 519~521쪽.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정전협상에서 포로문제에 관한 대담 비망록」, 대한민국사, (1952), 『FRUS 1952』, 58~59.
- 국사편찬위원회, “릿지웨이 총사령부, 방송으로 공산 측에 정전 협상 재개.” 서울신문, 1951.

### 2. 단행본

- 테렌마크, T. R., 『이런 전쟁』, 최필영·윤상용 옮김 (서울: 플래닛 미디어, 2019).
- 강성현, 『작은 ‘한국전쟁’들: 평화를 위한 비주얼 히스토리』 (서울: 푸른역사, 202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11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서울: 국군인쇄창, 2013).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전투사 금성 전투』 (서울: 중원문화사, 1987).
- 나중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 전쟁』 (서울: 양서각, 2020).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옮김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2005).
- 클라우제비츠, 카를 폰, 『전쟁론』, 류계승 옮김 (서울: 청아출판사, 2008).
-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온창일·김광수·박일송·나중남, 『6·25 전쟁 60대 전투』(서울: 성우, 2010).  
육군군사연구소, 『소련이 기술한 6·25 전쟁 I』, 이은연 옮김 (서울: 플래닛 미디어, 2023).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한국전쟁사 아틀라스』(서울: 육군사관학교, 출간일 미상).

### 3. 논문

- 강지현, 「6·25전쟁 정전협상 초기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군사』 제132호 (2024): 1-40.
-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사학연구』 제90호 (2008): 337-374.
- 김보영, 「연구동향 : 한국전쟁 휴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역사와 현실』 제80호 (2011): 345-359.
- 김보영, 「유엔군의 포로 정책: '석방'과 '송환'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6호 (2013): 177-221.
- 김보영, 「정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역사와 현실』 제88호 (2013): 3-15.
- 김영호, 「6·25전쟁 개전 결정과 휴전협상 과정에서 공산 3국 사이의 공조에 관한 비교 연구」, 『평화학연구』 제14권 제5호 (2013): 73-90.
- 김정기, 「금성전투와 쿠이토 쿠아나발레(Cuito uanavale) 전투에 대한 비교 연구: 용병술 차원의 관점에서」, 『군사논단』 제105권(2021): 223-242.
- 김정기, 「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년) 비교 연구: 개시(조건과 요인)와 정지(협상 과정 및 의제)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5권 제3호(2022): 37-63.
-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제32호 (2015): 325-364.
- 나중남,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제105호 (2017): 45-94.
-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군사』 제63호 (2007): 213-266.
- 박일송, 「6·25전쟁 시기 제2군단의 전투 효율성으로 본 금성 전투의 의의」, 『군사연구』 제150집 (2020): 111-136.

- 이상호, 「행정학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분석법의 방법론 분석: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1991-2005)의 사례」, 『행정논총』 제45권 제2호 (2007): 1-23.
- 이종관, 「6·25전쟁 당시 미국의 핵무기 정책 - 아이젠하워 정권을 중심으로」, 『군사』 제78호 (2011): 109-127.
- 이지원, 「질적 연구는 어떻게 사회과학적 가치를 확보하는가?: 신뢰성과 외적 타당성 논쟁의 결과와 함의」, 『한국사회학』 제59권 제2호 (2025) : 1-61.
- 임난영, 「Birkland의 어조값 측정을 고려한 정책학습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22).
- 정병준, 「한국전쟁 휴전회담과 전후체제의 성립」, 『한국문화연구』 제36호 (2019): 245-288.
- 정일영, 「한국전쟁의 종결에 관한 연구: 휴전협상의 지연과 협정체결의 요인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16권 제2호 (2013): 7-40.
- 허강호 · 양진우 · 김동현 · 복경수 · 유재수, 「단어 빈도와 유사도 분석 기반의 회의록 요약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0호 (2019): 620-629.
- Gray, Richard. "Data Sharing in Qualitative Research." Nurse Author & Editor 33, no. 1-2 (2023): 4-5.

#### 4. 기사

- 국사편찬위원회, “릿지웨이 총사령부, 방송으로 공산 측에 정전 협상 재개,” 『서울신문』 (1951).
- 중앙선데이, “上將 계급장 단 ‘붉은 간첩’ 리커농<下>,” 『The JoongAng』, June 8, 20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3174371#home>.

## 〈부록 1〉 59)

일자	화자	내용	분류	분류 사유
53.4.26.	공산	“나는 오늘 내가 말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세	제안 거절
53.4.27.	유엔	“직접 송환되지 않는 전쟁포로를 중립국에 인도하지는 것은 당신 제안의 한 요소였다. 우리는 이 제안에 비판의 여지가 없는 중립국을 추천하면서 충분히 응답했다. -중략- 우리의 확실한 노력을 당신들이 즉각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세	양보/합의 위한 자신의 태도 강조 - 유엔 측이 회담을 계속하기 위해 공산 측의 주장을 수용했던 것에 초점
53.4.30.	유엔	“왜 당신이 중립국 지명자를 지명하지 않았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당신의 망설임 뒤에 어떤 속셈이 없는 한, 우리는 더 이상의 지연으로 협상의 진전을 막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 확실히 한 달 전 당신의 원래 제안을 할 때, 당신은 그 문제를 어느 정도 고려했음에 틀림없다. 사전에 지명국과 상의했을 수도 있다.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가? -중략- 약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첫 단계로 당신이 생각하는 중립국을 지명하는 것을 제안한다.”	수세	추가 정보 요청 - 중립국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유엔 측이 제시한 스위스라는 대안을 공산 측이 소극 거부함. 거부하는 와중에도 공산 측은 자신의 대안을 계속해서 내놓지 않음. 이 발언은 회담을 지속하기 위한 추가적 정보 요청에 해당함.
53.5.1.	유엔	“우리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은 스위스를 지명했다. 우리는 또한 스웨덴도 그 임무에 대해 진정한 중립적이고 매우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당신과 상의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수세	대안 제시/정보 제공 요청
53.5.2.	유엔	“포로를 이 두 나라로 이송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포로들의 모든 해외 이송에 적용된다.”	수세	양보 - 공산 측은 앞서 논의에서 계속해서 유엔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제한사항을 밝힘. 유엔 측이 이 발언은 공산 측이 제시한 제한사항을 받아들인 것임.

59) <부록1>의 ‘내용’은 이상철, 전쟁기념관 편, 『6·25 전쟁 정전회담회의록 제2권: 제27~158차 판문점 본회담 기록(1951.10.25,1953.07.19.)』(서울: 전쟁기념관, 2022).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앞서 기술한 이지원(2025)의 질적 연구 신뢰도 재고를 위한 원자료 제공 필요성 주장을 반영했다.

53.5.2.	공산	“오늘도 또한 당신들은 협상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공세	책임전가/비난
53.5.4.	유엔	“5월 2일 토요일 회의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질문을 했다. “아시아에는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같은 많은 중립국이 있다. 이 중립국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 당신의 질문이 선전의 목적에 지나지 않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이 중립적이고 유능하며 따라서 적합하다고 명명한 4개국을 각각 고려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중략- 리는 이제 중립적이고 유능한 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을 지명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질문에 분명히 암시한 네 가지 국가 중 하나를 지명한다.”	수세	양보/합의 도출 시도
53.5.4.	공산	“당신들은 직접 송환되지 않는 전쟁포로를 중립국에 파견하는 것에 반대하며 비무장화될 기존 시설을 사용하여 억류 측 내의 원래 위치에 전쟁포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공세	대화 거부 - 유엔 측의 계속된 대안 제시에도 말을 돌리고 있음
53.5.5.	공산	“당신들이 전쟁포로를 조선에 임시로 관리하도록 파키스탄을 지명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파키스탄이 어떻게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세	책임 전가 - 유엔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유엔 측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파키스탄을 중립국으로 선정하는 후속 조치를 유엔 측이 제시하라고 압력을 행사함
53.5.10.	공산	“당신 측이 오늘 제기한 질문들 역시 세부적, 구체적인 방식을 건드리는 질문들이었다. 쌍방이 우리의 5월 7일 자 제안의 핵심 쟁점에 신속히 합의하여 그러한 세부적,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기를 바라며 내일 오전 11시 정각까지 휴회를 제안한다.”	공세	요구 거부 - 유엔 측이 요청한 정보 제공을 거부함
53.5.12.	공산	“전 세계가 조선 정전을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회담 재개 이래로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측은 지난 며칠간 사소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하	공세	책임 전가/유엔 측 정보 요청 평가 절하

		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는 당신 측 스스로 주장해 온 조선의 조속한 정전을 향한 열망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		
53.5.13.	유엔	“우리는 대부분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세	양보
53.5.13.	공산	“당신 측이 오늘 제출한 제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측이 4월 26일 그리고 5월 7일에 제출한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임은 물론, 오히려 당신 측이 4월 16일자 서한으로 제시한 3개 항의 제안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기도 함. 분명 이는 협상에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정전협상 전반의 전도를 위협하는 태도이다.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기조로 하여 제시한 제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공세	유엔 측의 제안 거부 및 제안 폄하
53.5.14.	공산	“더욱이 당신 측 제안이 담고 있는 터무니없는 전제를, 그리고 특정 주요 의제에 관한 극도로 비합리적인 규정들이 우리 측의 포로를 강제로 억류하려는 의도에서 명백히 비롯된 것임을 지적해 왔다. 우리 측은 당신 측의 5월 13일자 제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공세	비판/압박
53.5.15.	유엔	“만약 이 병력이 유엔군사령부의 병력 혹은 당신들의 병력이 단지 2km 밖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당신 측이 여긴다면, 우리는 가까이 상향 조정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보호 기구를 위협할 의사가 없다. 당신 측에서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수세	양보/방어적 설명
53.5.16.	공산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합리적 원안에 근거하여야 쌍방이 주요 쟁점에 합의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쌍방이 그 제안에 동의해왔다.”	공세	압박 - 타협이 아닌 자신들의 원안에 합의를 맞추어야 함을 강조함.

공산군이 5.25. 자 유엔군 제안에 큰 틀에서 동의하며 회담 급진전

기간 : 6.4. ~ 6.17.

상징적 발언 : 53.6.17.

- 유엔 측: 양측이 현재처럼 노력한다면 정전은 며칠 내에 서명 준비를 마칠 것이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는 지금 시점에 군사분계선에 관한 합의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공산 측: 우리는 이미 합의한 군사분계선을 공개하는 것을 당신들이 원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재차 당신들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한다.
- 유엔 측: 매듭지어야 하는 여러 사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군사분계선을 남아있는 유일한 문제로 여기는 추측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대중들의 마음속에 과도한 낙관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남아있는 사안을 매우 신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산 측: 우리 측은 쌍방 대표단이 합의, 비준한 군사분계선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 측에서 그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측도 당신들의 제안에 동의한다.

- 53.6.18. 반공포로 석방사건 -

53.7.10.	공산	<p>“우리는 강제로 억류되어 온 우리 측의 포로 인원 전원을 복구하고 정전 이후 그를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할로 인계할 책임에서 당신 측이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p> <p>-중략-</p> <p>이승만 정부는 여전히 우리 측 포로 인원의 강제 억류를 부르짖고 있으며, 또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며왔다. 이러한 이승만의 음모는 전쟁포로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인데, 당신 측은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는가? 우리는 비슷한 사태가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당신 측이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중략-</p> <p>지금까지 이승만 정부는 중립국위원회 인원 및 우리 측 인원을 향한 겁박과 위협을 공개적으로 부르짖어왔다.”</p>	공세	비판/비난/책임전가
53.7.10.	유엔	<p>“클라크 대장의 6월 29일자 서한에서 언급하였듯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p>	수세	양보/방어적 설명/합의를 위한 자신의 태도 강조

		<p>-중략-</p> <p>유엔군사령부는 중립국송환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공동적십자소조에 경찰 보호를 제공할 것이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이다.</p> <p>-중략-</p> <p>이는 유엔군사령부에 심대한 수송 부담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를 기꺼이 떠맡을 것이다.”</p>		
53.7.11.	유엔	<p>“유엔군사령부는 정전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국군 부대의 호전적 행위를 일체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p> <p>-중략-</p> <p>유엔군사령부는 정전의 이행을 제한하며 정전협정 초안의 조항들에 기꺼이 스스로를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p> <p>-중략-</p> <p>우리 측은 선의로 정전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있다.”</p>	수세	방어적 설명/합의를 위한 자신의 태도 강조
53.7.11.	공산	<p>“당신 측은 한 구성 요소인 남조선 정부와 군이 2만 7,000명 이상의 우리 측 생포 인원을 강제로 억류해왔으며, 쌍방이 방금 서명한 전쟁포로협정을 위반했다. 하지만 당신 측은 전쟁포로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생포 인원 전원을 복구할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아직 채택하지 않았다.”</p>	공세	비판/비난/책임 전가
53.7.12.	유엔	<p>“방금 완료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상 결과,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적정한 보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적대 기간 이후에도 유엔군과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현 정전협정 초안의 조항들은 이행될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 군을 포함하여 당신들에게 정전 조항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장한다.”</p>	수세	수용/양보
53.7.13.	유엔	<p>“어제 당신들은 서두에서 여섯 개의 질문을 내놓았다. 이미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했다. 하지만 이 논의의 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질문에 대하여 다시 말하겠다.</p> <p>-중략-</p>	수세	수용/양보

금성 전투 발발(13일 21시 부)			
53.7.14.	유엔	“우리는 유엔군사령부 총사령관을 대신 하여 당신 측이 지난 4일간 제기한 여러 질문에 대해 완전하고 단도직입적이며 명시적인 답변을 제공해왔다. 우리는 당신들이 유엔군사령부에서 파견한 대표들이 이 회담장에서 제시한 분명한 보장보다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수용하는 것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상대방 태도 비판 - 반공포로 석방사건 이후 유엔 측은 공산 측의 다양하고 반복된 압력에 대하여 추가적 정보를 제시하거나 앞선 발언으로 대신하였다. 그러나 13일에는 노골적으로 공산 측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53.7.14.	공산	“그러나 남조선 정부가 정전협정의 조항을 이행하며 당신 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당신 측이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조선 정전을 향한 반대를 여전히 부르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책임이 당신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세 비판/합의를 위한 자신의 태도 강조
53.7.14.	유엔	“(사실무근의 언론기사에 대해 질문한 공산군에 대한 답변으로) 말할 것이 있다면 지금 허기를 버린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할 바가 없으므로 내일까지 후회를 제외한다.”	공세 상대방 무시 - 이전까지 발언을 대체하거나 말할 바가 없다고 유엔 측이 언급한 경우는 공산 측이 반복된 질문을 할 때였다. 유엔 측의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 14일 유엔 측은 공산 측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할 말이 없다/당신들이 걱정할 바는 없다”라고 일관했다.
53.7.15.	유엔	“유엔군사령부는 이에 즉시 착수하자고 거듭 제안해왔다. 이에 관하여 당신 측은 이미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한 질문을 우스꽝스럽게 반복하는 데 회담 시간을 소모하며 그를 미루어 왔다. 그동안 당신 측은 2년 전에 정전회담을 시작한 이래로 최대의 공세를 개시했다. 당신들이 본 협상에서 정전 달성을 미루며 대규모 전투를 재개한 점을 고려하면, 당신들이 우리의 보장을 검토하고 수용하는 데에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혹은 고의로 정전 달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던 이 회담은 유용한 목적을 상실했다.”	공세 상대방 태도 비판/합의를 위한 자신의 태도 강조

53.7.15.	유엔	<p>“우리는 당신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보장을 제공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선택이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완수할 준비가 되었다. 이 회담들은 당신들이 그러한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앉아 쓸모 없는 수많은 대화를 들을 의사가 없다.”</p>	공세	비판/비난/책임 전가
53.7.16.	공산	<p>“당신들이 회담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명해야 하는 질문들은 아직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였다. 도리어 당신들은 전 세계인이 맹렬히 규탄한 과거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재차 취하며 일방적으로 회담장에서 철수하였다. 이는 정당하지 않다.”</p>	공세	비판
53.7.16.	유엔	<p>“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바와 같은 보장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은 사실 당신 측이 관심을 둘 사안이 아니다. -중략- 당신들이 진심으로 정전을 열망한다면, 어떠한 공식적 지위도 없는 언론 오보를 근거로 삼아 정전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교전과 전사를 연장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지금 당장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의 보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신들의 오늘 오전 발언을 고려하면, 사실상 서명 준비가 되었음을 전 세계가 알고 있는 현 정전협정을 완결할 의사가 당신들에게 없다는 점이 꽤 명백하다. 지난 며칠간 협상과 군사작전에 걸쳐 당신들이 취한 행동이 그를 증명한다.”</p>	공세	비판/비난
53.7.19.	공산	<p>“우리 측은 정전 이행의 보장에 관한 문제에 있어 논의를 결론지를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오늘 쌍방 대표단이 본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표할 것을 제의한다. 우리는 오늘 의 본회담에서 아래의 성명을 낭독하고 공표할 것이다.”</p>	수세	합의를 위한 자신의 태도 강조

53.7.19.	공산	“북조선과 중국 측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남조선 정부와 군의 정전협정 조항 준수에 관한 유엔군사령부의 보장을 오직 액면 그대로 수용할 것이다.”	수세	수용
53.7.19.	공산	“북조선과 중국 측은 조선 정전이 일단 서명, 발효된다면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을 이행할 것을 스스로 맹세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고 호전적 분자들의 음모를 일체 구축하기 위하여 조선 정전을 확실히 단호하게 지원할 것이라 믿는다.”	수세	방어적 설명/합의를 위한 자신의 태도 강조
53.7.19.	공산	“우리는 쌍방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인원이 조선에 도착하는 날짜에 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교환하는 데에 동의한다. -중략- 우리는 여러 분을 점검할 쌍방의 참모장교회의,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검토할 참모장교회의를 오늘 본회담 직후에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우리는 전쟁 포로 문제를 논의할 참모장교회의와 군사정전위원회 준비를 논의할 참모장교회의를 여는 데에도 동의한다.”	수세	양보/수용 - 공산 측이 유엔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Abstract〉

A Strategic Assessment of the Battle of Kumsung  
in the Final Phase of the Armistice Negotiatio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ttlefield and the Armistice negotiations -

Kim, In-Beom

This study reevaluates the Battle of Kumsong—commonly examined at the operational or tactical level—by analyzing its strategic significance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frontline developments and the armistice negotiations. Using transcripts of the armistice talks, the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frequency of recess proposals and shifts in tone, identifying clear correlations between battlefield dynamics and negotiation behavior.

A quantitative analysis shows that after the battle began, the UNC adopted a notably more assertive posture, and both sides intensified their efforts to secure rhetorical initiative. A qualitative analysis of tonal shifts was then carried out to examine whether there was a change in negotiating leverage in the wake of the battle. In addition, the study compared the ROK's release of POW with the Battle of Kumsong from the perspective of tone analysis, reassessing the relative magnitude of each even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final phase of the Korean war was not a meaningless attritional struggle but a

strategically pivotal event that continues to shape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These findings offer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contribute to broader understandings of how battlefield conditions interact with negotiation processes in the termination of modern conflicts.

Keywords : Korean war, Battle of Kumsong, armistice negotiations,  
quantitative, qualitative